

담당 : 대법원 재판연구관실
문의 : 공보연구관실
전화 : ☎ 3480-1895



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

-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사건(주심 대법관 이숙연)에 관하여 2024. 10. 23.(수) 14: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
-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첫 번째로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임
-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
 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‘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’)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, 국가가 위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됨
 - 이 사건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여부뿐 아니라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다른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- 재판장(대법원장 조희대)은 **폭넓은 의견 수렴**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**기관·단체**에 「민사소송규칙」 제134조의2 제2항과 「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**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함**
 -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함
- 또한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의견을 들어 **쟁점 관련 전문가 등을 참고인**으로 불러 공개변론 기일에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예정임
 - 원고 측 참고인: 배용호(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), 김종권(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 - 피고 측 참고인: 안성준(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), 안병하(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- 재판부와 당사자, 대리인(소송수행자), 참고인들 간의 **질의응답** 등 전 과정을 공개함
 -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하여 재판의 **공정성과 투명성 확대**
 -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**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재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**
- **판결 선고**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(전원합의기일)을 거쳐 2~4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



[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]

○ 기본 정보

사건번호·사건명	원고	피고
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	○○○ 외 2인	대한민국

*원고 당사자 및 양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의 참여가 예상됨

○ 사건의 내용

- 장애인등편의법,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(2022. 4. 27.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(이하 ‘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’) 제3조 [별표1]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‘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’로 규정하였음
-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%가 넘는 비율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에서 면제되는데, 위 시행령 규정은 1998년에 제정된 이래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음[2022. 4. 27. 대통령령 제32607호로 개정되면서 ‘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’로 규정함]
- 원고들 중 일부는 지체장애인인데, 국가가 위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,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, 그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

○ 원심(=제1심)의 판단 및 소송경과

- 원심은, 국가가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·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
-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함

○ 쟁점의 정리



- 피고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
-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경우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

[변론 진행 계획]

○ 변론 진행 시간 (예상)

- 14:00 ~ 16:30 (약 150분)
- *재판부의 쟁점정리
- *쟁점별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변론
- *재판부의 질의응답

○ 방청 안내[상세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]

- 2024. 10. 11.(금)부터 2024. 10. 16.(수)까지 이메일로 방청신청 후 2024. 10. 17.(목)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발표
- 2024. 10. 23.(수) 당일 13:10부터 당첨자에게 방청권 배부 예정

○ 방송 중계 등

- 2024. 10. 23.(수) 14:00부터 네이버 TV, 페이스북 Live,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

[공개변론에서 다루어 질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]

1.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

-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[별표 1] 제2항 (가)목의 (1)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데도 피고가 그 개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
[법리적 측면]

- ▶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행정입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음
 -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
 -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, 규정의 체계, 다른 규정과의 관계
 -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
 -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
 -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
- ▶ 나아가 판례는 행정입법 또는 그 부작위의 위법이 문제되는 영역이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 영역일 경우에는 그 행정입법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, 이 사건에서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
 -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헌법 규정 및 헌법적 지위
 - 장애인등편의법 및 그 하위법령,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경위와 취지, 개정경과 및 내용

[현실적 측면]

- ▶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
 -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노력
 - 국제기구 등의 지침, 활동, 개정권고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
 - 행정청이 장기간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, 그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지
 - 행정청이 법적 의무 부과 측면을 비롯하여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



떤 조치를 취하였는지

2.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

○ 피고의 고의·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충족 여부

○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 및 그 범위

[법리적 측면]

- ▶ 피고가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,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·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 -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직무집행의 위법성 외에도 공무원 개인의 고의·과실을 요구하고 있고,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고의·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직무행위가 ‘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’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
- ▶ 피고의 고의·과실 또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
 - 국가배상법의 맥락에서 개별 공무원의 고의·과실이나 직무행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
 -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,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이 장애인등편의법,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입법 작위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
 -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한된 원인 제공자를 개별 편의점으로 보아야 할지, 아니면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피고로 보아야 할지
- ▶ 아울러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있다고 평가할 경우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
 -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
 - 이 사건 쟁점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정신적 손해가 전부 또는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